

전국병원인과 국민의 힘으로 의약분업 바로잡자!



김 윤 수
서울시병원회장
의약분업개선 서명운동 공동추진위원장

빼앗긴 환자들의 권리인 ‘약국 선택권’을 되찾기 위한 의약분업개선 전국민 서명운동에 24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했다.

우리나라 병원계 뿐 아니라 전체 의료계 차원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수 많은 국민이 ‘약국선택권 회복’ 캠페인에 앞다퉈 동참한 것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11년째 시행중인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엄중한 개선명령에 따름아니다.

필자가 대한병원협회 의약분업개선

공동추진위원장으로서는 성상철 회장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의 병원들을 순회하며 서명운동을 독려하면서 병원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열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6월부터 4개월째 접어든 서명운동은 단순히 의약분업 제도로 한 순간에 기능을 상실한 병원약국의 외래조제업무를 다시 회복시키는데만 있는게 아니라 병마로 힘들고 지친 노약자 임산부 골절환자 등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줌으로써 편리하게 약을 탈 수

있게 하자는데 있음을 절감했다.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40만 병원 가족의 결집된 역량을 역력히 확인했으며 국민 편의를 외면한 불합리한 정책은 꼭 개선해야 된다는 열망이 활화산 같이 타올라 서명운동 추진에 큰 힘을 불어넣어줬다.

병원은 환자에게 투약을 비롯한 진료 전 과정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편리한 의로서비스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

병원계의 의약분업개선 서명운동은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로 외래 환자들이 투약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빼앗긴 것을 되돌려 주는 ‘환자복지 향상’ 운동이다. 차제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잃어버린 11년! 국민들은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아왔다. 더 이상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해선 안된다.

그릇된 제도는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하루빨리 개선해 정상화하는게 행정의 근본일 것이다.

병원계는 240여만 국민 여망을 담아 국회 청원이나 입법발의를 통해 약사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개선의 결실을 맺도록 온갖 노력과 역량을 쏟고 있다.

전국 병원인과 국민의 힘으로 의약분업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

